

02

통일 미래 준비 및 역량 강화

- 제1절 실질적 통일준비 착수
- 제2절 통일준비를 위한
국내외적 협력체제 구축
- 제3절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 제4절 북한정보 역량 강화

제2장 통일 미래 준비 및 역량 강화

통일문제는 국민 생활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등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토대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추진하였다. 「통일준비 공론화 사업」을 통해서 교육계, 학계 등 5개 분야별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통일논의의 지면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한편, 국제협력과 통일의 교를 통해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주변국가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통일의 역량을 다져나갔다.

또한 자문회의, 여론조사,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 체험 프로그램, 시민 통일운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의지를 결집하였다. 아울러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온라인 매체를 통한 쌍방향적 소통과 통일방송을 추진하였다. 한편 북한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집, 관리,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북한정보 통합시스템을 통해 북한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1절 실질적 통일준비 착수

1. 3대 공동체 구상 및 자원 마련 방안 모색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등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제안하면서, 통일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공동체 형성과정 및 자원조달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공론화 사업을 두 축으로 하는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2010년 8월 통일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통일자원 논의추진단」을 구성하여 20차례 회의를 통해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을 구체화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 후 조달청 공고를 통해 연구수행기관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0년 11월에 2차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의 취지와 연구내용 등을 설명하였고, 외부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1월까지 주제별 연구수행기관 선정을 완료하였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주제별 연구수행기관

연구 주제	연구수행기관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	통일연구원
평화공동체 추진 구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경제공동체 추진 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민족공동체 추진 구상	이화여자대학교
통일재원 마련 방안	한국재정학회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성균관대학교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공동체 형성을 통한 점진적·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통일 이전 공동체 형성과정 및 통일 이후 국가 통합과정 전체에 대한 로드맵 제시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단계별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비용 추계 및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며,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연구수행기관들은 5개 주제 합동으로 4번의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팀들 간 연구내용을 조율하였고,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도 보고회에 참여하여 연구의 일관성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1년 8월 11일에는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공동체 로드맵, 통일재원 조달방안 등과 관련한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정책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통일계정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수립하였다.



통일준비 심포지엄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결과보고회

2. 통일준비 공론화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일준비 공론화사업」을 추진하였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켜 통일 이슈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일의 편익, 통일 비전 등 통일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공론화 사업은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의 한 부분인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의해 기금 지원이 의결된 후,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계·학계·경제계·시민사회계·종교계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분야별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계는 초·중·고 학생 및 교사, 학계는 대학(원)생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 경제계는 지역별 경제인이며, 시민사회계는 일반시민 및 NGO, 종교계는 7대 종단의 종교인이다.

조달청 공고를 통해 연구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여 2011년 1월 18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종교계를 제외한 4개 분야 합동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공론화 사업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토론

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참여자들은 이렇게 마련된 다양한 토론의 장에서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긍정적인 효과, 바람직한 통일 방향, 통일 달성을 위한 과제 등을 함께 고민하였다.

통일준비 공론화사업 분야별 연구수행기관

분야	연구수행기관	대상	프로그램	횟수
교육계	서울교육대학교	초·중·고 학생 교사	통일 이야기, 교사 포럼, 통일 용틀임 한마당	131
학계	전국대학통일문제 연구협의회	대학(원)생 전문가	대학(원)생 세미나, 전문가 세미나, 대학생 특강 등	49
경제계	연세대학교 리서치앤리서치	경제인	경제인 세미나, 심층면접, 의식조사	17
시민 사회계	세이브NK 국제평화재단 평화통일국민포럼	일반 시민 단체	통일포럼, NGO 통일 세미나	22
종교계	평화문화재단	종교인	통일 세미나, 통일 워크숍, 의식조 사 등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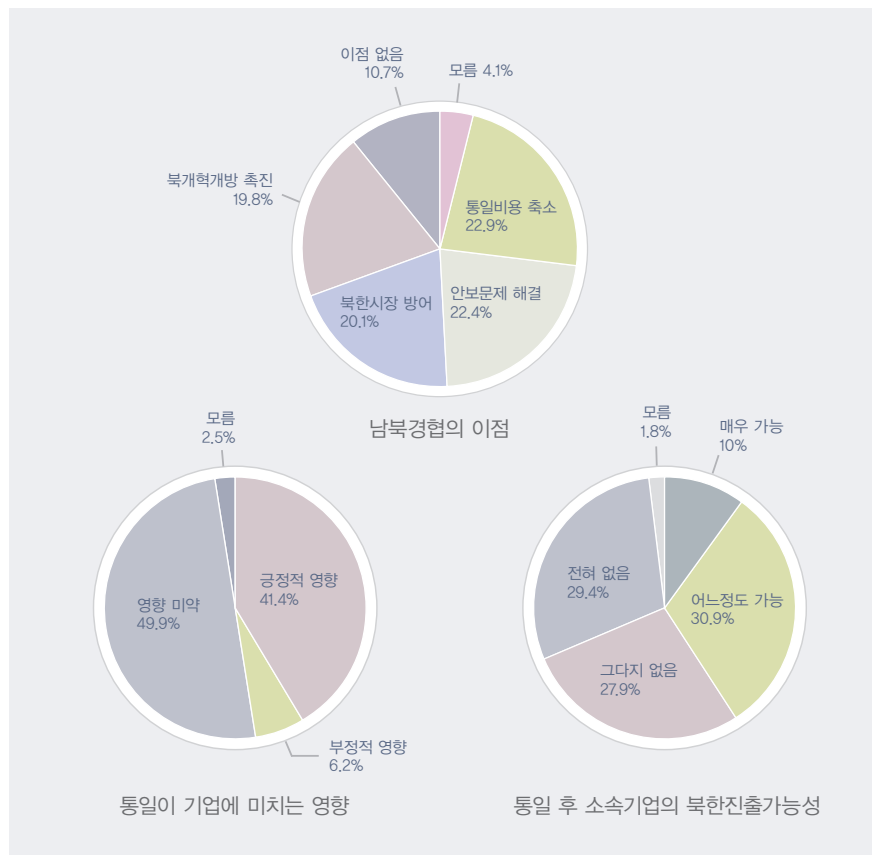
교육계는 통일 미래시대의 주역으로 활동할 초·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생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통일 인식을 심어 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통일 용틀임 한마당'을 통해 전국 주요 7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통일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 대상으로는 '통일을 위한 교사 포럼'을 통해 교사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교사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통일 의식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계는 총 131회의 세부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및 문제점을 토대로 학교 통일교육 문제 극

복 및 발전방안 등과 함께 공론화 사업의 사업총괄로서 타 분야와 연계한 공론화 확산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계는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통일 논의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또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도 '대학(원)생 세미나'에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저명인사를 초청한 '대학생 특강' 및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학생 통일캠프'를 마련하여 대학생들이 통일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학계는 총 49회의 세부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 대학사회의 통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우려를 불식하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되었다.

경제계는 경제인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2011년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1,015명을 대상으로 '경제인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통일문제에 대한 경제인들의 의식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드러난 주요 쟁점을 의제로 하여 지역별 및 단체별로 '경제인 세미나'를 진행함으로써 경제인들이 통일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총 35명의 경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은 앞서 의식조사 등에서 나타난 경제인의 의식을 본인이 직접 설명해 봄으로써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계는 15회의 공론화 행사 및 1회의 의식조사, 심층면접 등 총 17회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경제인 통일인식조사 결과



시민사회계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통일포럼 미래로’를 진행하였다.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통일논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NGO를 대상으로 한 ‘NGO 통일 세미나’를 통해 NGO가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논의를 시민사회 내에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사회계는 대규모 개방형 문화행사 실시, 통일관련 유명인사 초청 등으로 언론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노력했으며, 대규모 통일대회를 포함한 총 22회에 걸쳐 공론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종교계는 ‘통일 세미나’를 통해 종교계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7대 종단을 아우르는 종교인들의 통일논의 공론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각 종단은 ‘통일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각 종단에 속한 종교인들이 통일의 주요 의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형 종교 행사 등에 통일 사진전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서도 종교계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1년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종교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국 최초의 ‘종교계 통일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종교인의 통일인식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종교계는 인식조사를 포함하여 총 29회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종교계 통일 세미나

이처럼 통일논의 공론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사업이 시행되어 2011년 10월까지 약 3만 7,400명을 대상으로 행사와 매 행사 시 현장 여론조사 및 분야별 여론조사(경제계·종교계) 등 총 257회의 공론화 사업을 전국적으

로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한편, 5개 분야 합동으로 중간보고회(2011년 4월 8일, 남북회담본부), 1차 결과보고회(2011년 6월 7일, 남북회담본부)를 개최하여 사업 진행 상황 및 중간 결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평가단 및 자문위원의 평가를 받아 보완하였다.

10개월간에 걸친 공론화 사업 결과는 2011년 10월 5일 프레스센터에서 최종 결과보고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용역수행기관들은 그간의 사업 성과 및 의식조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사업 중 노출된 한계 및 향후 극복·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초 사업수행계획상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였고 전국적 행사 진행을 통해 각계각층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면서 통일 논의의 저변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사회의 통일준비 방향을 정책적으로 이끌어가면서 과정상의 갈등을 토론의 장에서 소통을 통해 수렴하는 계기가 된 것도 사업의 중요한 성과였다. 금번 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통일담론을 통해 통일논의의 확산을 기하면서 통일준비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5개 분야 현장여론조사 결과(주요 문항)

(단위 : %)

문항	보기	전체	교육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종교계
통일에 대한 관심도	매우 관심	24.1	22.6	17.2	42.8	41.6	16.3
	관심	55.0	61.7	58.8	46.1	46.2	49.3
	관심없음	17.8	14.8	20.8	9.8	10.8	25.8
	전혀 관심없음	3.1	0.9	3.2	1.3	1.3	8.6
통일의 준비 정도	매우 잘됨	0.9	0.9	0.7	0.7	1.9	0.3
	대체로 잘됨	8.7	9.4	5.4	8.7	14.4	9.8
	그다지 안됨	72.9	78.8	73.1	72.7	68.1	68.5
	전혀 안됨	17.5	11.0	20.8	17.8	15.5	21.3

문항	보기	전체	교육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계	종교계
통일편익 vs 통일비용	편익 > 비용	44.4	47.8	46.1	55.8	48.0	27.3
	편익 = 비용	18.9	19.4	19.9	13.5	17.7	19.6
	편익 < 비용	36.7	32.8	33.9	30.7	19.6	53.1
바람직한 통일재원 마련방안	일정부분 예산적립	61.4	68.7	60.6	63.2	56.4	56.2
	통일세 등 신설	12.8	13.4	9.9	15.8	19.0	11.4
	국민성금	11.5	8.2	10.9	9.4	14.0	16.0
	국제금융기구 등 도움	11.6	8.0	14.4	7.7	8.0	16.3
통일을 위한 중점 과제	자주 국방력 강화	16.6	14.6	12.4	15.7	24.0	22.1
	내부 통일준비 강화	31.0	35.3	28.8	24.7	32.5	31.0
	대북경제지원 확대	4.1	3.9	3.9	2.7	3.0	6.6
	남북교류협력 증대	37.4	37.7	42.2	45.2	26.7	32.8
	통일외교 강화	8.8	7.7	11.0	9.7	12.0	2.5

* 조사대상 : 교육계(교사) 1,645명, 학계(대학생/대학원생) 2,383명, 경제계(경제인) 554명, 시민사회계(일반 시민/단체) 997명, 종교계(종교인) 1,148명

3. 통일법제기반 구축

정부는 통일과정에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2009년부터 통일법제 기반구축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여 왔다.

우선 각 정부기관이나 학계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통일법제 연구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공유하는 「통일법제 DB구축」 작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관련 연구들을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2010년에는 관련 연구의 원문을 확보하고 저작권 동의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1년에는 이를 업데이트하였다. 민간이나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서 연구한 것까지 포함

하여 2011년까지 연구결과의 원문은 600건, 목록은 1,600건이며, 이를 CD로 제작하여 관계부처 및 연구소·연구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관련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통일부·법무부·법제처 등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통일법제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통일부의 정책연구 및 해외사례조사 계획 등을 검토하여 법무부·법제처와의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민·관의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통일법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0년에는 대법원(사법연수원 연구교수), 2011년에는 입법부(국회 법제실 재정법제과장)가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통일법제에 관한 민·관 협의체로서의 위상을 더 강화하였다.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저변을 확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술활동도 지원하였다. 2011년 4월에는 한국공법학회가 주최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후원하였고, 7월에는 서울대 헌법·통일법센터가 주최하고 사법연수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이 참여한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후원하였다. 11월에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아시아법제포럼」의 일부 행사로 「아시아법제의 변화와 남북법제의 정비」를 주최하였다.

이외에도 남북 간 통합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주제에 대해 법제들을 정비·연구하고 있으며, 체제전환국에 대한 사례들도 계속 조사하여 남북 간 통합에 대비하고 있다.

제2절 통일준비를 위한 국내외적 협력체제 구축

1.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

정부는 통일정책이 국민의 의사와 법령의 제정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유관부처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협력체제에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설립·운영되고 있다. 동 협의회는 통일부차관(위원장)을 포함하여 19개 정부 부처·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며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10년도 하반기부터 2011년 전체회의 및 정책소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정착지원제도 개선 방안, 정착기본금 인상 문제 등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방안들을 협의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업무는 사회적응교육, 취업, 주택, 교육, 사회복지, 지역정착 등 정부 업무 전 분야에 걸쳐있는 만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된 각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및 민간단체와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들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범정부적 협의체이다. 동 협의회는 위원장(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13명의 정부위원과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1989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규정」(대통령령, 1989년 3월 31일 시행)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다음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률에 근거를 둔 협의체로 발전하였다. 협의회는 출범 후 2011년 12월 말까지 총 244회 개최하였으며, 2010년 7월 이후 총 12회를 개최하여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대북 수해피해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29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2008년 5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부처 간 실무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2010년 7월 이후 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2. 통일외교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주변국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통일준비 차원에서 통일외교와 국제협력을 핵심과제로 삼고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에는 한반도 및 북한 정세 평가와 통일 정책개발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국제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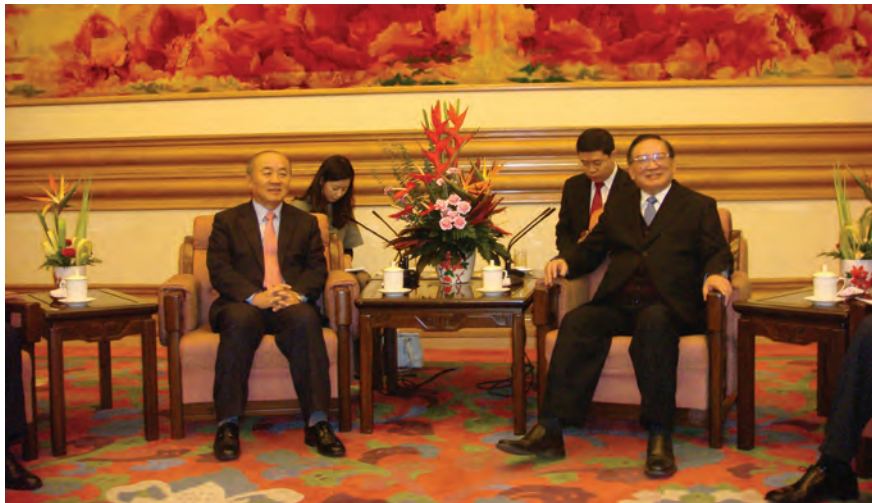
고위정책협의

고위정책협의는 통일부장관이 직접 관련 국가를 방문하여 정부 및 의회관계자, 현지 전문가 또는 동포들을 만나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고 한반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정부의 통일의지와 정책을 설명하는 최고위 수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다.

2010년에는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통일부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독일 통일 기념행사(2010년 10월 2일 ~ 4일)에 참여하였다. 이는 독일 정부가 특별히 통일부장관을 초청하여 이루어진 방문으로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독일의 각별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독일 방문 시 현 장관은 외교·국방·내무장관 등 독일 정부 및 의회의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 한반도 통일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독 통일자문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는 등 독일 통일·통합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1년에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직접 관련국을 방문하는 고위정책협회가 두 차례 개최되었다. 11월 2일부터 6일까지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하여 빌 번즈(Bill Burns) 국무부 부장관과 로스레티넨(Ros-Lehtinen) 하원 외교위원장, 조 리버먼(Joe Lieberman) 상원 국토안보위원장, 짐 웹(Jim Webb)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 등 의회관계자들을 면담하는 기회를 가졌다. 류 장관은 우리 정부의 유연화 조치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함으로써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뉴욕에서는 민주평통협의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여 통일항아리 캠페인 등을 통한 통일준비의 필요성과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이해를 구하였다.

이어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였다. 중국 방문기간 중에는 다이빙궈 국무위원,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양제츠 외교부장 등 중국 당·정 고위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우리 정부의 유연화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하였다. 아울러 현지 한인동포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였다.



탕자쉬안 중국 전 국무위원 면담

국제통일전략대화

국제통일전략대화는 실무급 통일부 관계자들이 미·중·일·러·EU 등 주요국을 방문하고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협의와 설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고위정책협의를 실무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전략대화는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정책토론과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현지

동포 및 여론주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남북관계 현황 및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해외 동포들의 적극적 지지와 이해도를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10년에는 통일부 관계자들이 한반도 문제 관련 주요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방문하여 해당 정부 관계자들과 대북정책 추진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이 같은 기회를 활용하여 현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기반을 강화하였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경제연구소(KEI) 및 아시아재단 주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고, 시애틀 및 뉴욕 등을 방문하여 동포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일본에서는 도쿄 및 교토 지역을, 중국에서는 베이징 및 상하이 지역을 방문하여 전문가회의와 동포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구소련 지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고려인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였고, 양국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1년에는 중국, 일본, 호주, 미국, 유럽 등을 방문하여 실무급 정책협의를 갖고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국제문제연구소, 일본에서는 히로시마 평화연구소를 방문하여 현지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호주에서는 멜버른, 캔버라, 시드니 등을 방문하고 호주국립대와 공동으로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미주지역 통일전략대화에서는 워싱턴 지역 민주평통협의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미외교정책위원회(NCAFP) 관계자, 의회 의원보좌관들과 면담하고, 미국평화연구소(USIP)와 공동으로 한반도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유럽지역 국제통일전략대화에서는 독일 연방정부와 2012년도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

행하고, 아일랜드 더블린을 방문하여 아일랜드의 평화협상 경험 공유를 위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통일부 장·차관 주요인사 면담 및 인터내셔널 포럼

통일외교의 측면에서 통일부 관계자들이 해외를 방문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고위정책협의」와 「국제통일전략대화」라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 활동으로는 장차관의 외빈 면담과 「인터내셔널 포럼」이 있다. 통일부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다양한 주요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의 장·차관 면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010년 통일부를 방문한 주요 인사로는 미국의 웬디 셔먼(Wendy Sherman) 전 대북정책 조정관, 커트 캠펔(Kurt Campbell)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스티븐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국무부 전 대북정책특별대표, 리처드 킹(Richard King) 북한 인권특사, 리처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전 국무부 부장관,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참의원 의원,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대신, 피터 로우(Peter Rowe) 전 주한 호주대사 등을 들 수 있다.

2011년에도 다양한 인사들이 통일부를 방문하였는데, 스페인의 히메네스(Jimenez) 외무장관과 호주의 케빈 러드(Kevin Rudd) 외무장관을 비롯하여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중국의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Glyn Davies)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장관을 면담하고 한반도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남북관계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주요국 대사 간담회, 라운드테이블 회의 등을 개최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와 이해를 구하였다. 아울러 각국 주한

공관의 실무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와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여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2011년 10월에는 주한 공관의 실무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통일안보현장 방문과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계기시마다 방한한 해외전문가를 초청하여 「인터내셔널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국제업무 관련 직원들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고든 플레이크(Gorden Flake) 미국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 에버하르트 쿠어트(Eberhard Kuhrt) 독일 연방내무부 구 동독지역 재건담당과장, 김철 중국 요녕 사회과학원 한반도 연구센터 비서장, 존 박(John Park)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자문위원 등이 「인터내셔널 포럼」에 초청되어 직원들과 다양한 한반도 이슈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였다. 「인터내셔널 포럼」은 2010년과 2011년에 각 6회 개최되었다.

나. 통일외교를 위한 국제회의체 운영

코리아글로벌포럼(Korea Global Forum)

「코리아글로벌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1.5트랙(반관반민)의 국제적 다자협의체이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및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창설된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연례회의체이다. 「코리아글로벌포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일·중·러·유럽·아시아 등 총 10여 개국에서 정부 인사 1인과 민간 전문가 1인 등 총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자유로운 토론과 브레인스토밍 효과의 제고를 위하여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코리아글로벌포럼」 창설회의는 2010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국제적·지역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한국·미·일·중·러·영·프·독·호주·인도·싱가폴 등 11개국에서 전·현직 정부 인사(국장급)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21명이 참여하였다. 윌리엄 코헨(William Cohen) 전 미국 국방장관이 기조강연을 하였으며, 주요 참석인사들은 미국의 성 김(Sung Kim) 전 6자회담 특사, 빅터 차(Victor Cha) 조지타운대 교수, 일본의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지구규모과제심의관,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교수, 중국의 진찬룽 런민대 교수 등이다. 참석자들은 “아태지역 안보현황”, “북핵문제 현황과 전망”, “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안보 역학구도” 등을 세부주제로 하여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였다.

2011년 제2회 「코리아글로벌포럼」은 “동북아 안보역학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포럼에는 10개국에서 전·현직 관료 및 민간 전문가 21명이 참석하였으며, 존 햄리(John J. Hamre)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이 기조강연자로 참석하였다. 회의는 “최근 한반도 상황”, “변화하는 동아시아 안보역학구도”,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등을 세부주제로 하여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한반도비전포럼(Korean Vision Forum)

「한반도비전포럼」은 한반도 관련 주요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통일문제 관련 국제회의체로서, 한반도 통일비전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여 통일 지지 여론을 확산시키고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 일반시민 등의 참여를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책임감을 제고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2010년 5월에 제1회 「한반도비전포럼」을 개최하였다. 「한반도비전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700여 명의 일반인들이 참석하여 영상질문, 토론 등을 통해 참여와 공감의 장을 넓혔다. 동 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 :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독일 통일 20주년과 한반도에의 함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으로의 길”, “비핵·평화·민주주의의 한반도”, “한반도의 미래경제 비전 :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 “함께 생각하는 녹색 한반도” 등의 주제를 가지고 이틀간 토론하였다. 콜린 파월(Colin Powell) 전 미 국무부 장관이 기조강연자로 초청되었고, 웬디 셔먼(Wendy Sherman) 전 대북정책 조정관도 참석하여 토론에 참여하였다. 700여 명의 청장년층 일반인들은 통일비전 공모전, 영상질문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한반도비전포럼」에 참여하였다.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을 말하다” 공모전은 통일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그 결과는 『통일을 말하다』라는 소책자로 발간되었다.

2011년 11월 18일에는 독일 통일 당시 주요 역할을 했던 독일측 인사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독일 통일의 경험에 비추어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제2차 「한반도비전포럼」을 개최하였다. 제2차 「한반도비전포럼」은 독일의 전문가들과 국내 원로들이 같이 하는 비공개 형식의 ‘비전포럼’과 대학생 및 청년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비전대강연’ 등 크게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비전포럼’에서는 “독일통일의 의미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비전”을 주제로 독일의 호르스트 텔치(Horst Teltschik) 전 콜 수상 외교안보정책 특보와 구본태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발제를 하고,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전 동독 군축·국방장관을 비롯한 독일측 인사들과 한승주, 이인호, 이경숙, 차인태 등 통일고문, 김석우 전 통

일부차관 등의 한국측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화여대 김영의홀에서 개최된 ‘비전대강연’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외르크 쇤봄(Jörg Schönbohn) 전 독일 국방차관, 로타어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 전 동독 총리 등이 강사로 참석하여 강당을 가득 채운 500명의 대학(원)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 통일에 대한 미래비전 및 독일 통일의 경험”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통일부는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이하여 2010년 10월 1일 독일과 통일문제 협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양국의 경험 및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한·독 통일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써 2011년 1월에는 독일 연방 내무부측과 실무 정책협의를 갖고, 「한독 통일자문위원회」 구성을 구체화하였다. 「한독 통일자문위원회」는 우리측에서 통일부차관, 독일측에서 연방 내무부차관을 포함하여 양측에서 각각 12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로서 독일 통일 및 통합과정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효율적 교환을 위해 자문하는 기구이다. 이는 통일 미래 준비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통일과 통합과정에 참여하였던 독일측 관계자들로부터 자문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창립기념식

「한독 통일자문위원회」 창립기념식은 2011년 11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행사는 한·독 양 차관의 개회사, 국무총리 축하, 류우익 통일부장관과 리하르트 슈뢰더(Richard Schröder) 전 동독 마지막 의회 사민당 원내총무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동 창립기념식에는 통일고문, 정책자문위원, 주한 외교사절, 주한 독일대사관 초청인사, 남북관계 전문가, 언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11년 1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개최된 자문위원회회의에는 독일측에서 크리스토프 베르크너(Christoph Bergner) 연방내무부 정무차관, 로타어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 전 동독 총리 등 독일 통일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전직 정부관계자 및 중진학자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한국측에서는 김천식 통일부차관을 비롯하여 한승주 전 외무장관 등 사회 각계각층 원로급 인사 11명이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쉬납아우프 전 내무부 실장은 동 회의에서의 발제를 통해 독일통일의 요인을 80년대 중반 이후의 소련 내 변화와 경제·주택·일자리·교육 등 생

활수준 향상에 대한 동독인들의 소망과 희망으로 설명하였다. 뤼디거 폴 전 할레 경제연구소장은 동독지역 체제전환의 핵심요소로 동독지역에 경쟁력을 가진 기업분야의 재건, 사회적 생산기반의 현대화 및 교육내용 개혁 등을 언급하였다.

독일측은 또한 자유토론을 통해 독일 통일 시 경제적 문제는 잘 해결되었으나 심리적인 부분이 해결이 잘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동독과 서독이 심리적으로 같은 높이에서 통일을 했다는 자존감을 가지지 못해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간적 측면의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독통일자문위원회」 2차 회의는 2012년에는 5월 초 베를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그 후 연 1회 한국과 독일에서 번갈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절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1. 국민참여와 여론수렴

이명박 정부는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사회지도층 및 여론주도층 인사들로부터 대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였고, 남북관계에 긴급 현안이 발생할 경우마다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나날이 다양화·세분화되어 가는 정책 자문 수요에 맞춰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안에 '정책홍보분과'를 신설하고, 자문위원

수를 대폭 증가시켜 총 9개 분과 119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였다. 그리고 2010년 6월 30일부터 2011년 12월 31까지 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28회 등 총 3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았다. 또한 사회 각계 원로급 인사가 망라된 통일고문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고, 종교계 지도자 등 사회 지도급 인사들로부터 수시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정부는 폭넓은 국민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차관을 포함하여 통일부의 주요 직원들이 국민과의 대화와 접촉의 면을 넓혀 나갔다. 통일부 장·차관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장관 51회, 차관 75회 등 총 126회에 걸쳐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만나 정책대화를 나누었다. 나아가 이 같은 국민과의 만남이 단순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히 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다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어 온 국민과의 정책대화를 지역적으로 확대하고 경제계·학계·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합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통일운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통일문제에 관한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를 비롯하여 민간통일단체인 민족통일협의회(이하 '민통'),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등과 상시적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이들 주요 정책고객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민주평통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개최한 '2011 통일정책 국민공감 대회'에는 통일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여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민통 전국대회 및 통일포럼, 민화협 창립기념 후원의 날 및 대의원 대회 등 각종 행사에 장·차관이

참석하여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1년에는 민간 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민간 통일운동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25개 단체의 우수 사업에 대하여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한편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동 프로그램에는 2011년 한 해에만 11회에 걸쳐 총 600여 명의 주요 정책고객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책고객들은 백령도, 강원도 철원 등 남북 접경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건강한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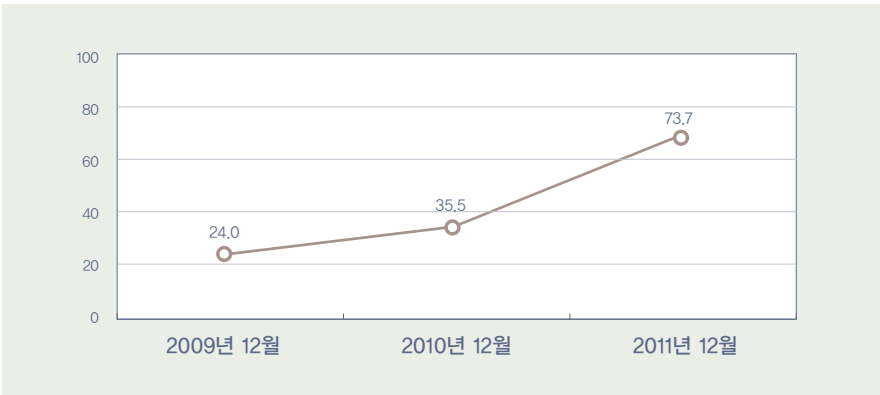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2009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해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지지를 아끼지 않은 밑바탕이 되었다. 특히, 2011년 9월 19일 류유익 장관이 취임한 후에는 유연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정책 소통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정부는 통일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여론조사⁴⁾도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2010년 12월, 2011년 12월 모두 전년 동월대비 상승하였다. 2011년 12월 조사에서 비정치적 성격의 종교·문화 행사에 대한 방북조치에 대해서 ‘현재 허용수준이 적절하다’(40.5%)라는 의견이 2011년 9월(26.2%)보다 크게 상승하여 유연화 조치에 대한 지지도도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리서치앤리서치, 갤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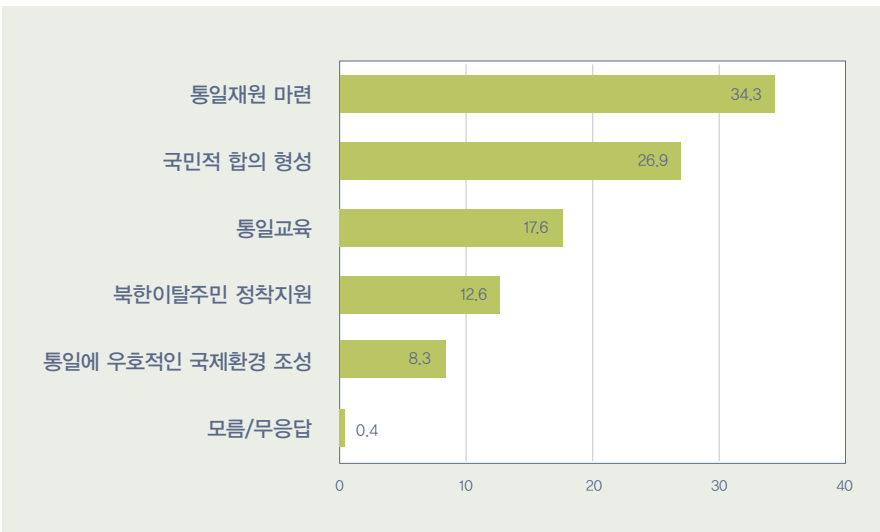
대북정책 지지도

(단위 : %, N=1,000)



통일 준비를 위해 필요한 조치

(단위 : %, N=1,000)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염원과 건전한 남북관계에 대한 요구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2011년 12월 조사에서는 통일에 대한 관심도

는 ‘관심있다’가 75.5%, 통일에 대한 열망은 ‘원한다’가 79.5%로 집계되었다. 통일준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통일재원 마련’(34.3%)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적 합의 형성’(26.9%), ‘통일교육’(17.6%), ‘북한이 탈주민 정착지원’(12.6%),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8.3%) 순이었다.

반면 우리나라 군사안보 상황과 관련하여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나 군사안보 상황의 위협성에 대한 불안인식은 그동안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1년 하반기에 크게 감소하였다.

2. 국민과의 쌍방향적 소통 강화

정부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과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으며,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바른 남북관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정책추진 상황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였다. 특히 실질적 통일준비를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목소리와 바람을 담아내 사회적 합의와 국민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가. 오프라인 소통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11년 2월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라는 정책설명 자료를 발간하여 국민들에게 배포하였다. 8.15 등 주요 계기시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사의 결집이 필요할 때에는 맞춤형 리플렛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위해』(2010년 8월)와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2010년 10월) 등을 제작·배포하여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재확인하였다.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익 광고도 제작하였다. 제작한 영상물은 공중파 TV, 공항, 철도, 지하철, 옥외 전광판 등에 방영하여 통일준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버전의 통일송을 제작하고 ‘슈퍼스타 K2 Top11 콘서트’, ‘라디오 통일콘서트’, ‘통일송 클래식 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기적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통일 뮤직비디오 제작, 통일 에피소드 연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의지를 제고하였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상을 보여주기 위해 2011년 8월부터 2개월간 「제1회 통일동화 창작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총 500여 편의 동화가 공모되었다. 이 중 수상작 11편을 『통일 세상 동화로 만나요』라는 제목의 동화책으로 발간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6천여 곳과 어린이 도서관 70여 곳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앱으로도 개발하여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동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동화



- 나를 밟지 마세요
- 내 친구 외계인
- 우리는 통일형 이산가족
- 돌던지기
- 어흥, 평화 여행으로 출발
- DMZ와 물뿌리풀
- 대나무 숲 이야기
- 김치로 통일하자!
- 두 날개로 나는 자건거
- 달만두 별냉면
- 악어와 악어새 이야기

통일송

두근두근 설레는 그날
이제 이제 오고 있어요

함께 준비해요 우리 미래
그토록 꿈꾸던 행복한 순간

성큼성큼 다가온 그날
이미 이미 시작된 행복
우리 같이해요 할 수 있죠
모두가 그리던 행복한 날

함께라면 더 커져요
함께라면 더 행복해요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크게 웃을래요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함께하는 그 순간을
우리 힘을 모아 준비해요
행복한 통일이 다가오네요

함께라면 더 커져요
함께라면 더 행복해요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크게 웃을래요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함께하는 그 순간을
그날이 멀리 달아나지 않게
다함께 준비해요
행복한 통일



나. 온라인 소통

통일을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소통에 주력하였다. 먼저 2010년 10월 정책홍보 및 정보제공의 대국민 접점인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의 안정적 운영과 SNS 연계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미지부터 사용환경까지 소셜 허브기능을 가진 홈페이지로 개편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1년 8월 영문 홈페이지(eng.unikorea.go.kr)의 메뉴구조 및 디자인을 업데이트하여 정책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였다.

네티즌과 보다 신속·정확하게 소통하고자 뉴미디어를 활용한 정책홍보 및 정보제공에도 주력하였다.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개설하고 기존 온라인 채널과 연계하여 소통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였다. 2010년 3월에 미투데이 통일부 공식 계정(me2day.net/mouni)을 개설한 이후, 6월에 트위터(twitter.com/uni_kr) 계정을 개설하였으며 7월에는 정부 부처 최초로 페이스북(facebook.com/unikorea) 계정도 개설하였다. 2011년 12월 말 기준 페이스북 좋아요(likes)는 6만 6,603명, 트위터 팔로워(follower) 1만 1,497명, 미투데이는 1만 5,416명을 기록, 페이스북 팬(fan)수, 트위터 팔로워(follower) 수가 정부 부처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통일부 대표 블로그인 '통일 미래의 꿈'은 젊은 층의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켰다. 2008년 8월 개설 이후 2011년 12월 말까지 누적 방문자 수가 154만 명(티스토리 3만 9,200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011년 9월 영문홈페이지 페이스북(facebook.com/unikorea.eng)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SNS미디어 채널을 구축·운영하여 국민과의 접촉점을 확대하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였다.

온라인 홍보수단을 다양화하고 감성적인 방식의 홍보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층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블로그를 활성화하고, 젊은층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학생으로 구성된 '상생기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첫 출범한 상생기자단은 2011년 12월 기준 제4기가 활동 중이다. 4기 기자단은 3기보다 25명이 늘어난 45명 규모로 구성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통일문제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미국 등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 8월 3일에 제1기 해외 상생기자단(9명)을 구성하였으며, 2011년 7월 25일에는 제2기 해외 상생기자단(15명)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상생기자단은 각종 남북관계 현장이나 통일부 행사 등에 직접 참여하여 사진, 인터뷰, 동영상, 수필, 토론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상생기자단

웹툰(만화)·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와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노력에 힘입어 2011년 12월 (주)한국인터넷소통협회 주최 「제4회 대한민국인터넷 소통대상」에서 인터넷 소통 중앙행정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홍보전문지 「The PR」지 주최 「대한민국 소통대상」에서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제4회 대한민국인터넷 소통대상



「The PR」지 주최 대한민국 소통대상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보급 확대에 따라 스마트기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위해 '통일 골든벨'(앱스토어), '통일! 행복한 상상'(앱스토어), '통일송'(안드로이드, 앱스토어, 티스토어, 올레마켓) 등 앱(Ap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2월에는 민간 포털(네이버)과의 협약을 통해 지식 Q&A 통일분야 서비스를 실시하여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였다.

다. 인터넷 통일 방송

세대 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차를 완화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국민 공감형 방송을 추진하였다. 인터넷 통일방송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고 2011년 3월부터 9월까지 영상물 88편을 자체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라디오 시험방송을 82회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방송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1년 10월 1일 ‘인터넷 통일방송’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통일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인터넷 통일방송은 크게 Uni TV와 Uni 라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Uni TV는 주요 이슈를 전하는 주간 유니 뉴스와 통일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룬 교육 영상자료, 그리고 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한 각종 영상물 등으로 편성·운영하였다. Uni 라디오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13:00~14:00) 매일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것과 동시에 보이는 라디오로도 방송하고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통일시트콤 ‘웁닥웁닥’을 총 20편의 움니버스 형식으로 제작하고, 인터넷 통일방송 홈페이지와 한국 정책방송(KTV), 미국 교민방송(Tan-TV)을 통해서 방영하였다.



통일시트콤 웁닥웁닥



인터넷 통일방송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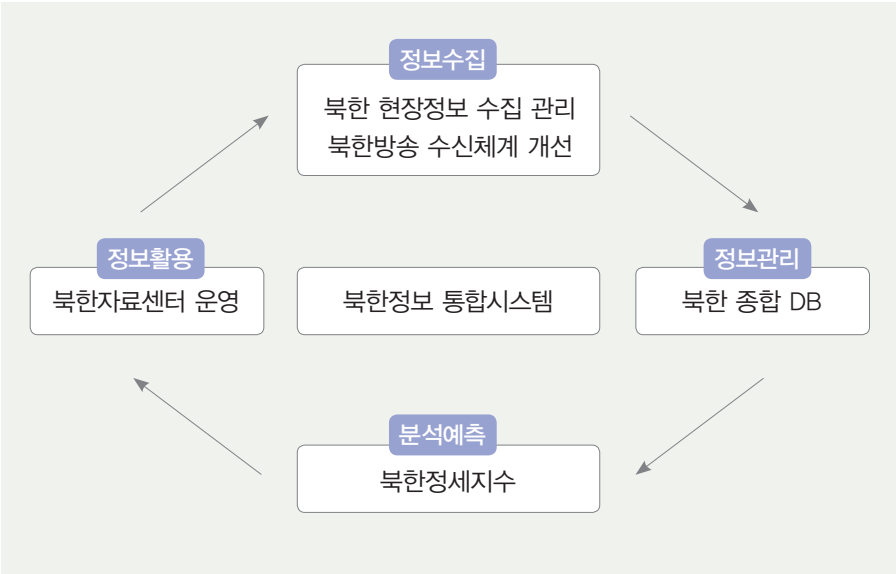
구분	매체	내용
오프라인	정책설명자료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위해,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등
	콘서트 및 프로그램	슈퍼스타K2 Top11콘서트, 라디오 콘서트, 기적의 오디션
	통일동화	통일세상 동화로 만나요
온라인	상생기자단	47(45명), 해외 27(15명)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eng.unikorea.go.kr(영문)
	미투데이	me2day.net/mouni
	트위터	twitter.com/uni_kr
	페이스북	facebook.com/unikorea facebook.com/unikorea.eng(영문) facebook.com/unitvboard(인터넷 통일방송)
	블로그	blog.unikorea.go.kr
	웹툰	
통일방송	앱	
	Uni TV	주간 유니 뉴스, 교육 영상자료, 시트콤 웁닥웁닥 등 unitv.unikorea.go.kr (인터넷 주소) munitv.unikorea.go.kr (모바일 주소)
	Uni 라디오	월요일 ~ 금요일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제4절 북한정보 역량 강화

가. 북한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정부는 북한과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북한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년부터 북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집·관리·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북한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정보 통합시스템은 북한 현장정보 수집·관리, 북한방송 수신체계 개선, 북한정세지수 개발, 북한 종합DB 구축 등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정보 통합시스템



나. 북한 현장정보 수집·관리

1990년대 이후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민간차원의 대북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방북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 관련 정보 원천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이들로부터 북한의 산업·인문지리 등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북한의 산업·인문지리 등 현장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10년에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과 국내외 방북자 총 2,05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피면접자가 인지하고 있는 북한의 지역별 산업·인문지리 등 현장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2011년에는 보다 참신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010년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설문기법과 면접기법을 개선·보완하여, 총 1,521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 현장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정보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북한 종합DB에 반영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북한의 산업·인문지리 등 현장정보는 북한 종합DB의 기초자료로서 축적되어 북한 정세분석과 통일정책 수립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다. 북한방송 수신체계 개선

정부는 북한방송 자료를 북한 정세를 분석하는 중요한 정보 원천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 방송 매체들을 아날로그 방식으

로 수신하다 보니,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고 수집된 방송 자료를 제한적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북한방송 정보 수집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북한방송 수신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북한 조선중앙TV, 단파라디오 방송을 디지털 방식으로 수신할 수 있는 수신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고화질·고음질의 북한방송 자료를 보다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2011년에는 디지털화된 수신시스템을 개선·증설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방송 수신체계 디지털화의 주요 사업으로 북한방송을 직접 수신하여 자동으로 녹화하고 저장하는 자동녹화시스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고 저장하는 시스템, 내·외부 해킹 및 부정자료 유출을 방지하는 시스템, 수집·저장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검색·편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 등이 있다.

정부는 북한방송 수신체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고, 북한실상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방송 및 언론기관 등의 방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북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라. 북한 종합데이터베이스(DB)

정부는 2010년 진행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북한 종합DB(① 북한 자료 ② 북한 인물 ③ 북한 산업·인문지리 정보 등 3개 분야)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1차년도인 2011년에는 북한 자료(북한 원문, 국내외 자료, 분석보고서 등)와 북한 인물 관련 통일부 내외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북한 정세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1년 3월 ~ 4월간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12월 중순까지 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용역을 진행하였다. 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상시 및 정기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북한 산업·인문지리 정보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한편, 유관기관 및 일반국민용 DB로 구분해 정보서비스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 종합DB 구축이 완료되면 정부의 북한 내부 동향 및 정세변화에 대한 분석능력이 제고되고 체계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고객별로 정보수요에 맞는 북한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 북한정세지수

정부는 2010년부터 북한정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예측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판단이 통합 적용된 지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북한정세지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의 북한정세지수 개발 연구는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 등 각 분야별 북한 전문가와 지수 개발 방법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2011년에도 2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북한정세지수 연구개발단 이외에 별도의 북한 및 지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해외의 저명한 지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적실성 있는 북한정세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2010년에는 ‘안정성 지수’와 ‘변화동향 지수’를 개발하여 지수값을 산출하였으며, 지수 개발과정에서 획득·생산하게 되는 각종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1년에는 2010년에 개발된 북한정세지수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연구와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향후 개발·보완 과정을 거쳐 북한정세지수 개발이 완료되면 북한 정세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가능해짐으로써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바. 북한자료센터 운영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1989년 5월 22일 광화문에 설립한 북한자료센터는 2009년 7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하였다.

북한자료센터는 북한 관련 도서자료 7만여 권, 정기간행물 1만여 권, 파일자료 3000여 건, 시청각자료 8000여 건, 통일부 발간물 6700여 건 등 총 10만여 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원전자료 보유현황

(2011년 12월 말 기준 / 단위: 건)

종 류	단행본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비도서자료	계
자료 건수	17,884	4,322	5,223	1,185	28,614

북한자료센터는 대국민자료 서비스와 함께 통일·북한문제 전문가, 대학생, 관련 단체 회원들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 및 다양한 북한 문

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총 49회를 개최한 가운데 7500여 명이 참여하였고, 1989년 이후 2011년 12월 말까지 총 614회가 개최되어 총 6만 4천여 명이 참가하였다.

북한자료센터는 2200여 편의 북한영화를 소장하고 있고, 1990년 3월부터 매월 1회 북한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다가 최근에는 수시 상영체제로 바꾸어 언제든지 북한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2006년부터는 오두산통일전망대와 서울, 인천, 창원, 제주, 부산, 광주지역 통일관 등 8개 지방 도시로 북한 영화 상영지역을 확대하였다. 2011년에는 북한 영화를 총 1,606회 상영하여 13만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1990년 이후 2011년 12월 말까지 관람인원은 총 9300여 회에 걸쳐 140만여 명에 이른다.

북한 영화상영뿐만 아니라 북한자료 우편대출 서비스를 통하여 그동안 서울·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북한 정보·자료의 접근 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고, 이를 계기로 각급 학교 및 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북한자료 우편대출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든 북한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북한자료의 효율적·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장 자료에 대한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시스템 구축, 원문DB 구축, 최신 검색엔진 도입, 모바일 웹 서비스 및 SMS 안내,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디지털 아카이브 도입, 전자도서관 및 My Library 서비스 개편 등 온라인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2011년 한 해 동안 모두 382건의 자료를 e-Book으로 만들었으며, 2000년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 총 2,498건의 북한관련 자료를 e-Book으로 제작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unibook.unikorea.go.kr)를 통해 조선중앙TV 프로그램 편성표 안내, 북한영화 소개, 북한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지 이용 고객도 계속 증가하여 2011년에는 연 52만 명에 이르렀다.

대외적으로는 국내 유관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자료교류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까지 국회도서관 등 18개 기관과 정보·자료 공유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